

영국 DFID, 국익에 기반한 원조 등 우선순위 과제 제시

1. 제시 배경

- DFID 신임 장관(Mordaunt)은 지난 1월 31일 신임 차관(Rycroft)과의 첫 회동에서 ‘국익에 기반한 원조’ 등 우선순위 과제* 발표

* 관련 공식문건은 확인되지 않으나, '18.1.31자 영국 하원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직전 개최된 장·차관 인터뷰(Evidence session)에서 확인됨

2. DFID의 우선순위 과제(Priorities)

- (국익에 기반한 원조) 영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수가 증가해야만 영국의 원조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

- 무역부(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)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, 브렉시트 이후에도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원조를 활용할 계획
- 공공부문 서비스 등에서 영국의 전문성이 충분하기에 DFID의 원조사업 대부분은 영국기업들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

- (정부부처 간 협력) 국익에 기반한 원조를 위해 DFID의 전문인력 파견 등 정부 부처 간 협력방안 제시

- 원조 분야 전문가가 많은 DFID는 원조 부문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희망하는 타 정부부처에 무역부와의 협업을 주요 협력사례로 제시
- DFID는 무역부에 협력전담 인력을 파견하여 빈곤극복과 영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

- (평화유지 ODA 인정비율 제고) 개발과 빈곤감축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현재 15%만 계상되는 평화유지(치안강화) 비용이 ODA로 더 많이 인정되도록 노력할 계획
 - DFID의 전임 장관(Patel)이 평화유지 비용의 ODA 인정비율을 7%에서 현행 15%까지 올리도록 DAC에 요청한 사례도 있음
- (다자기구 활동 모니터링) 보다 많은 성과창출을 위해 'U.N Educational'과 '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' 등 실적이 저조한 하위 30%기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

3. 시사점

- 영국을 포함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 회원국도 개발협력 정책에서 원조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
 - 2015년 영국은 '국익 안에서 글로벌 과제 해결'이라는 제목으로 개발협력정책을 발표하였으며, 2017년 11월 DAC은 평가네트워크 회의에서 '이타주의에서 국익으로'라는 제목의 안건을 상정
- 우리나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원조를 위해 전통적인 이타주의적 원조 목적에 국익의 관점을 접목할 필요
 - 원조사업은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에 현지사업 수주기회를 제공함
- 우리나라도 국익에 기반한 원조를 위해 원조 시행기관과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
 - 예컨대, EDCF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기재부 '관계기관협의회'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정보 등을 공유

자 료 : Devex 웹사이트(<https://www.devex.com/news/new-dfid-leadership-team-sets-out-priorities-91997>)

EDCF Issue Paper Vol.6 no.4, 개발협력정책의 변화: “국익(National Interest)의 부상

작 성 : 책임심사역 이 기 성, ks.lee@koreaexim.go.kr